

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(10.2)

-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오늘 새벽,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였습니다.
 - 이로 인해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입니다.
 - 정부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,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.

[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]

- 조금 전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.6%로 42개월 만에 1%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.
 - 그러나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,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,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이상의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 - 9월 수출이 588억불로 올해 최대이자 역대 9월중 1위를 달성하면서,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내수의 경우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, 부문별로도 온도차가 있는 모습입니다.
 - 설비투자는 하반기 들어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나, 건설은 작년 수주부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.

- 소비는 서비스 부문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며 회복조짐이 있고, 실질임금 상승폭 확대로 소비여력이 개선되는 흐름입니다만,
 - 누적된 부채부담, 지방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소상공인, 지방 등 취약한 부문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내수 각 “부문별 맞춤형 처방”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

[기업투자 활성화 방안]

- 오늘은 ‘투자 활성화 장관회의’를 발족하여 투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합니다.
- 투자의 회복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된 사업의 실행을 촉진하고,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하는 등 투트랙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 - 4분기 내 약 24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사업 가동을 지원하고, 20조원 규모 민·관 합동 건설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안도 도출하겠습니다.
 - 10대 제조업이 금년 목표로 한 11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중 하반기에 계획된 62조원 규모 투자 이행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.
 - 아울러, 금년 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합니다.

[건설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]

- “건설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”도 추진하겠습니다.
- 첫째, 건설 수주부진을 공공 추가투자와 민자 활성화로 적극 보완합니다.
 -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1조원 늘려 총 8조원 규모로 추진하고,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
 -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,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합니다.

□ 둘째, 건설업계의 핵심어로인 공사비 상승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
- 시멘트·골재 등 핵심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, 자재 공급기반을 확대하여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%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
□ 셋째,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.

-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(현행 5년)을 7년까지 한시 확대하겠습니다.

[민간소비 맞춤형 지원]

□ 끝으로, 소비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각종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고,
- 다자녀가구의 전기차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.

□ 서민·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
-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,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-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융지원 3종 세트*와 새출발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, 이달 내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*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, 지역신보 전환보증,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

- 또한, 소비촉진행사 기간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탄탄한 소상공인 매출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.
- 청탁금지법령 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

- 채소류 등 체감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-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용물량(6천톤) 조기출하와 수입(4천톤) 확대 등을 통해 1만톤을 추가 공급하고,
 - 이달말 종료 예정인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- 오늘 마련한 내수지원 과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빈틈없이,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.
- 이어서, 안건과 관련하여 국토부 장관, 중기부 장관, 금융위원장, 농식품부 장관, 해수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
(국토부 장관 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 모두발언)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